

##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활용 방안\*

김이배\*\*

### 〈요 약〉

본 연구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녹색금융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중에서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런 역할을 해주는 판단 기준이 K-택소노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과 K-택소노미와 관련된 제도인 녹색채권에 대한 내용 및 녹색채권 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관리지침,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해 주는 K-택소노미의 활용, K-택소노미의 활용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색금융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제도 및 활동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조달된 자금이 녹색경제에 목적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하여는 녹색경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K-택소노미가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어야 한다. 특히 AI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의 접근방법을 AI 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녹색금융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녹색금융실무도 더 쉬워질 것이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K-택소노미의 활용 및 AI 적용을 제안한 것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 및 K-택소노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향후 녹색금융이 발전되고 K-택소노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통계수치가 축적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녹색금융, K-택소노미

\*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24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kyibae@duksung.ac.kr](mailto:kyibae@duksung.ac.kr), 주저자

논문접수일 2026년 1월 26일      게재확정일 2026년 2월 2일

## I. 서 론

기업 및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하나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금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기업경영에서 금융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건실한 금융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미래의 녹색경제활동에는 녹색금융이 적합한 수단이 된다. 또한 기업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녹색경제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녹색경제활동을 위하여는 녹색금융이 금융 측면에서 그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업에서 녹색경제활동이 어떤 것이고, 향후에 녹색경제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설정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저탄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규제 및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정책당국과 금융회사들은 거시 금융안정성 관리와 함께 관련 규제 및 공시 요구 조항의 준수, 그리고 새로운 영업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내외적으로 녹색금융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박재하·임대웅, 2022).

녹색금융(Green finance)이란 조달된 자금을 녹색경제, 저탄소경제 전환, 친환경 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을 말하며, 일반적인 금융에 추가하여 녹색경제를 기본으로 기후환경 비즈니스에 자금이 사용되게끔 하는 금융을 추구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택소노미)<sup>1)</sup>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말한다.<sup>2)</sup> 택소노미(Taxonomy)란 특정 분류체계를 말하며, 택소노미는 어떤 특정 항목 또는 계열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녹색분류체계는 녹색에 대한 분류체계이며, 이 분류체계에 해당되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기업은 기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체제 내에서 기업들은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기업들의 활동도 매우 다양하다. 수많은 기업들의 경제활동 중 어느 것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되고, 어느 것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분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취지에서 등장한 것이 녹색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는 활동은 녹색경제에 해당되고 녹색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은 활동은 녹색경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김이배 등, 2024). 녹색금융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의미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녹색금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기업의 활동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은 다양한 정책·민간자금을 통해 시중 금리보다 낮게 자금을 조달하거나 보증을 받아 여신 한도를 늘리는 등의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다.<sup>3)</sup>

1)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Taxonomy, K-택소노미, Green Taxonomy를 혼용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31.).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3) BNZ PARTNERS 홈페이지(202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2021년, 환경부),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2022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관된 원칙·기준으로 정의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제정 후 녹색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환경부, 2024.12, 2025. 12 개정). 또한 금융위원회·환경부는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시켜주려는 목적으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2024.12).

본 연구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는 녹색금융이 발전되어야 하고 녹색금융의 전제는 녹색경제에 자금을 공급하고 활용하는 바, 기업의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 여부를 판단해 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K-택소노미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녹색금융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선행연구와 더불어 검토하며, 제Ⅲ장에서는 녹색금융의 중요한 수단인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금융 활동을 지원해주는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K-택소노미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제Ⅳ장에서는 앞의 논의를 바탕으로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K-택소노미의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 및 공헌점, 한계점을 제시한다.

## Ⅱ. 녹색금융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선행연구 검토

### 1. 녹색금융의 정의

녹색금융이란 친환경 프로젝트 및 저탄소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활동으로, 돈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산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향하도록 설계된 금융을 말한다(이은숙, 2025). 또한 녹색금융은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자원 및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에 자금을 공급하여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자금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금융체계를 지칭한다(박재하·임대웅, 2022).

녹색금융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기본적인 취지는 녹색경제활동,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이라는 점이다. 녹색금융 개념은 지속가능금융, 전환금융, 기후금융, 저탄소금융 또는 다른 경우 ESG금융 개념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 금융의 목표와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송홍선, 2023). 녹색금융과 관련된 금융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기도 한다.<sup>4)</sup>

4) 이은숙(2025).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Taxonomy 외부검토 활용 방안”.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

〈표 1〉 녹색금융 관련 금융

| 구 분                                       | 내 용                                                                      |
|-------------------------------------------|--------------------------------------------------------------------------|
| 지속가능금융<br>(sustainability-linked finance) |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측정된 기업의 성과와 연동된 금융, 기업이 사전 설정한 지속가능 목표를 달성하면 금융상의 혜택을 누리는 구조 |
| 전환금융<br>(transition finance)              |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활용되는 금융                                  |
| 녹색금융<br>(green finance)                   | 직접적이고 측정가능한 친환경효과를 창출하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 녹색금융으로 제공된 자금은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     |
| 기후금융<br>(climate finance)                 |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의 저감 목적을 위한 금융                                           |

※ 출처 : 이은숙(2025)

최순길 등(2025)은 녹색금융 개념을 수출지원금융으로 확대하여 녹색산업 분야인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녹색금융을 ‘녹색수출금융’으로 정의하였는데, 녹색수출금융을 녹색금융의 한 부분으로 보고 녹색수출금융에 녹색금융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녹색금융의 종류<sup>5)</sup>

녹색금융의 종류 또는 형태는 녹색채권, 녹색여신(녹색대출),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정책금융 또는 정부 지원, SLL, 녹색펀드, 녹색보험 등이 존재한다.

〈표 2〉 녹색금융의 종류

| 구 분        | 내 용                                                                                                                    |
|------------|------------------------------------------------------------------------------------------------------------------------|
| 녹색채권       | 기업, 정부, 공공기관 등이 친환경 사업(프로젝트)을 위해 특별히 발행하는 채권                                                                           |
| 녹색여신(녹색대출) | 친환경 사업을 하는 기업에 은행이 낮은 금리로 대출<br>‘녹색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로, 자금사용처가 관련 분야로 한정<br>* 예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자금, 친환경 설비 교체 대출 |

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5) 이은숙(2025).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Taxonomy 외부검토 활용 방안”.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 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표 2〉 녹색금융의 종류 (계속)

| 구 분            | 내 용                                                                                          |
|----------------|----------------------------------------------------------------------------------------------|
|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 녹색경제활동 영위 중소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금융기관의 신용 보강을 통해 유동성을 높여 발행<br>* 녹색자산 발행 기업에 발행 금리 지원 및 외부검토비용 지원 |
| 정책금융(정부 지원)    | 예 : 녹색보증제도, 탄소중립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차보전 지원사업 등                                                      |
| SLL(지속가능성연계대출) | 대출금리 등을 기업의 ESG 등 지속가능성 관련 경영목표 이행여부에 연계한 대출상품으로, 자금 사용처가 제한되지 않아 기업이 일반적인 목적으로 사용 가능        |
| 녹색펀드, 녹색보험 등   |                                                                                              |

※ 출처 : 이은숙(2025)

### 3. 녹색금융의 현황

우리나라 녹색금융 현황은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 수단 중 통계치가 발표되어 파악이 되는 것은 녹색금융 관련 채권들이다. 이 중에서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중심으로 그 발행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 현황

녹색금융 관련 채권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3〉 ESG채권 섹터별/연간 발행량 추이

단위 : 백만원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총합계         |
|-------|---------|------------|------------|------------|------------|------------|------------|------------|-----------|-------------|
| SLB   | 0       | 0          | 0          | 0          | 0          | 220,000    | 150,000    | 320,000    | 0         | 690,000     |
| 금융    | 0       | 0          | 0          | 0          | 0          | 220,000    | 100,000    | 200,000    | 0         | 520,000     |
| 회사    | 0       | 0          | 0          | 0          | 0          | 0          | 50,000     | 120,000    | 0         | 170,000     |
| 녹색채권  | 600,000 | 1,470,000  | 960,000    | 12,624,000 | 6,430,000  | 7,462,254  | 8,579,825  | 6,880,900  | 0         | 45,006,978  |
| 금융    | 500,000 | 840,000    | 850,000    | 2,250,000  | 850,000    | 1,820,000  | 3,070,000  | 3,380,000  | 0         | 13,560,000  |
| 특수    | 0       | 0          | 0          | 1,280,000  | 340,000    | 1,643,900  | 1,236,200  | 2,240,700  | 0         | 6,740,800   |
| 회사    | 100,000 | 630,000    | 110,000    | 9,094,000  | 5,240,000  | 3,998,354  | 4,273,625  | 1,260,200  | 0         | 24,706,178  |
| 사회적채권 | 300,000 | 26,853,752 | 58,460,000 | 61,992,975 | 46,474,360 | 64,911,096 | 53,336,824 | 44,459,185 | 2,073,600 | 358,861,791 |
| 금융    | 300,000 | 600,000    | 2,300,000  | 9,370,000  | 9,235,000  | 9,410,000  | 12,260,000 | 10,630,000 | 0         | 54,105,000  |
| 특수    | 0       | 25,953,752 | 56,160,000 | 45,944,409 | 31,515,300 | 50,473,500 | 36,628,700 | 28,865,300 | 2,073,600 | 277,614,561 |
| 회사    | 0       | 300,000    | 0          | 6,678,566  | 5,724,060  | 5,027,596  | 4,448,124  | 4,963,885  | 0         | 27,142,230  |

〈표 3〉 ESG채권 섹터별/연간 발행량 추이

| 구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 총합계         |
|--------|---------|------------|------------|------------|------------|------------|------------|------------|-----------|-------------|
| 지속가능채권 | 0       | 1,950,000  | 4,640,000  | 12,499,000 | 5,967,000  | 3,357,000  | 2,652,400  | 2,500,000  | 0         | 33,565,400  |
| 금융     | 0       | 1,750,000  | 3,780,000  | 7,615,000  | 4,106,000  | 2,627,000  | 1,600,000  | 2,430,000  | 0         | 23,908,000  |
| 특수     | 0       | 200,000    | 200,000    | 630,000    | 620,000    | 230,000    | 452,400    | 50,000     | 0         | 2,382,400   |
| 회사     | 0       | 0          | 660,000    | 4,254,000  | 1,241,000  | 500,000    | 600,000    | 20,000     | 0         | 7,275,000   |
| 총합계    | 900,000 | 30,273,752 | 64,060,000 | 87,115,975 | 58,871,360 | 75,950,349 | 64,719,048 | 54,160,085 | 2,073,600 | 438,124,16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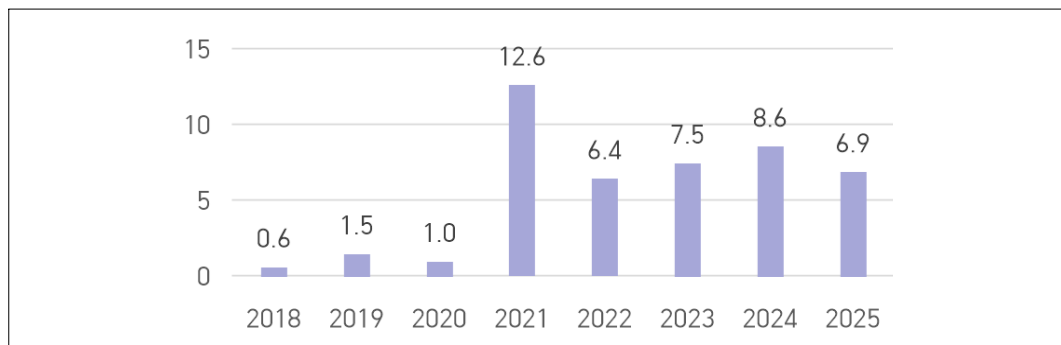
※ 출처 : infomax, 최종원(2025)

이를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별로 구분하여 그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나. 녹색채권

〈그림 1〉 녹색채권 발행 추이

단위 : 조원



※ 출처 : infomax, 최종원(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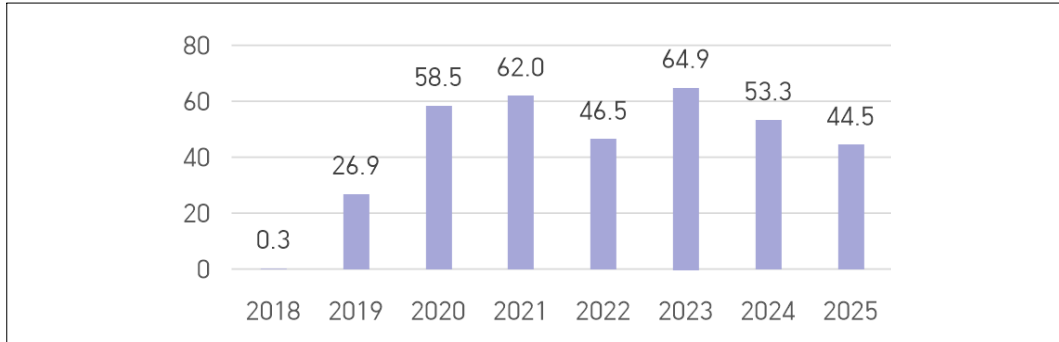
2025년 녹색채권 발행량은 6.9조원으로 2021년 발행량 12.6조원의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회사채 섹터 발행량이 급감하고 있는데 회사채인 녹색채권은 조달자금의 주 사용처였던 2차전지 투자자금이 전기차 판매부진으로 축소되면서 발행량도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사의 녹색채권발행량은 2022년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사의 발행이 전체 금융사 발행의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기차 구입 목적으로 녹색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수채는 2025년 발행량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으며(약 2.3조원), 특수채인 녹색채권 자금의 사용처는 친환경 주택건설과 운송관련 온실가스배출 저감,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것으로 사용처의 큰 변화는 없었다.

녹색채권은 2025년 금리 상승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경우 녹색프리미엄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녹색채권 발행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사회적채권

〈그림 2〉 사회적채권 발행 추이

단위 :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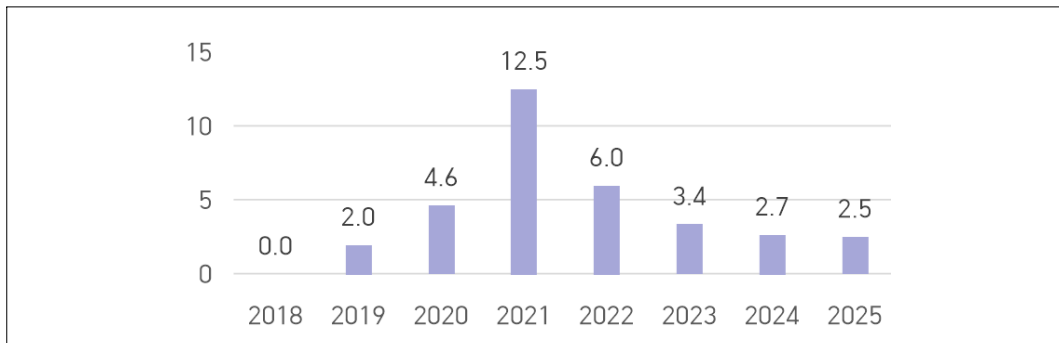
※ 출처 : infomax, 최종원(2025)

사회적채권의 대부분은 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액으로 주택정책에 따라 발행량이 급변할 수 있다. 2025년 사회적채권은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화정책으로 거래량이 축소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면서 MBS 발행요인이 감소되었다.

#### 라. 지속가능채권

〈그림 3〉 지속가능채권 발행 추이

단위 : 조원



※ 출처 : infomax, 최종원(2025)

2025년 지속가능채권 발행액은 약 2.5조원으로 자금의 사용도는 친환경차량 구입과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것으로 여신전문금융사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2024년과 유사하다. 지속가능채권 발행량이 12.5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던 2021년에는 일반 기업들의 지속가능채권 발행 비중이 35%에 달했으나 2025년에는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친환경사업으로의 투자가 축소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 가. 도입배경

EU는 EU 택소노미를 제정하여 녹색경제활동, 즉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였으며, 기업에게는 EU 택소노미에 기반한 공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EU 택소노미는 녹색금융의 출발점으로 친환경 활동으로 자금의 흐름을 유도하고, 시장참여자들의 투자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고 있다(금병욱, 2025). 이처럼 탄소중립으로의 자본투자를 위한 첫걸음은 녹색경제활동 정의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녹색금융을 위해서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 즉 녹색분류체계(Taxonomy, 분류학) 도입이 필요하다. 이런 녹색경제활동의 정의를 위해 글로벌 녹색채권 원칙에서는 관련 목록을 만들었으나, 그린워싱 차단에는 한계가 보여 EU를 중심으로 녹색·전환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원칙 기반의 녹색경제활동 정의인 택소노미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임대웅, 2025a).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는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021년, 환경부)되었으며, 기업의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일관된 원칙·기준으로 정의한 가이드라인으로 2021년 제정 후 기술동향 등 녹색경제 현실을 반영하여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환경부, 2024.12, 2025. 12 개정).

##### 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요<sup>6)</sup>

###### (1) 정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을 말한다.

###### (2) 원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원칙은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다.

이 원칙은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구체화된다. 첫째, 환경 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이는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함(SC ; Substantial Contribution)을 의미한다. 둘째,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으로,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함(DNSH ; Do No Significant Harm)을 의미한다. 셋째,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으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함(MS ; Minimum Safeguards)을 의미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31.).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3) 구성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2개 부문, 100개 경제활동으로 구성된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으로, 재생 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93개 경제활동을 말한다. 전환 부문은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으로,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을 말한다.

### (4) 판단 절차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는 경제활동이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판단기준

| 항 목  | 내 용                                                   |
|------|-------------------------------------------------------|
| 활동기준 | 경제활동이 제시된 분류에 부합하는지 판단                                |
| 인정기준 | 경제활동이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배제기준 |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                         |
| 보호기준 | 경제활동이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지 판단    |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31.)

### (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은 총 100개의 경제활동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녹색부문은 93개, 전환부문은 7개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표 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개정 목록

| 구 분            |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수)                                                      |
|----------------|-----------------------------------------------------------------------|
| 제1절 녹색부문 (97개) |                                                                       |
| 공통(4)          | 산업(2), 연구개발(1), ICT(1)                                                |
| 온실가스 감축(48)    | 산업(8), 발전·에너지(23), 수송(3), 도시·건물(5), 농축산업(3),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4), 임업(2) |
| 기후변화 적응(5)     |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2), 기후위기 평가(2), 기후위기 대응역량 제고(3), 기후위기 대응 인프라 강화(4)       |
|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8) | 물(8)                                                                  |

〈표 5〉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경제활동 개정 목록 (계속)

| 구분            | 경제활동 분야 (경제활동 수)                                  |
|---------------|---------------------------------------------------|
| 순환경제로의 전환(13) | 생산(3), 소비(2), 관리(2), 재생(6)                        |
| 오염 방지 및 관리(5) | 대기오염 방지 및 처리(3), 해양오염 방지 및 처리(1), 토양오염 방지 및 처리(1) |
| 생물다양성 보전(4)   | 생물다양성(4)                                          |
| 제2절 전환부문 (7개) |                                                   |
| 온실가스 감축(7)    | 산업(1), 발전·에너지(4), 수송(2)                           |

※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5.12.31.)

## 5. 선행연구 검토

녹색금융 및 K-택소노미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그 역사가 짧아서인지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다. 학술적 연구보다는 제도나 관련 법규의 입안을 위한 정부 당국의 자료와 녹색금융 관련 산업계의 연구보고서나 발표 자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녹색금융 발전에 관한 연구는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개선방안(김이배 등, 2023), 녹색금융을 수출분야로 확장한 연구(최순길 등, 2025) 등이 있다. 김이배 등(2023)은 우리나라의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녹색금융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단계부터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 먼저 알려야 하고, 민관 공동펀드의 운용, 녹색채권 발행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녹색금융의 확대, 투자자를 위한 세제 혜택 등과 같은 지원방안 강화, 그린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투자자의 녹색금융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정착 등을 제시하였다. 최순길 등(2025)은 녹색수출금융을 녹색금융의 한 분야로 보고 녹색수출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는데, 녹색수출금융 전담기관 설립, 수익성 담보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 모델 도입,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크 분담 체계 도입, 녹색산업 금융상품의 차별화 등을 제안하였다.

녹색금융 중 녹색채권에 관한 연구는 기후변화 위험과 녹색채권 발행 규모 사이에 관한 연구(배유진 등, 2022), 녹색채권과 택소노미에 관한 연구(이민경, 2025) 등이 있다. 배유진 등(2022)은 기후변화 위험 노출도와 녹색채권 발행 규모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환경 위험에 비례하여 녹색자금이 조달되고 있다는 점에서 녹색채권이 단순히 그린워싱 수단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민경(2025)은 녹색채권에 대한 강화된 인증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는데, 이런 제재수단으로 인증체계가 도입된다면 녹색채권이 택소노미에 부합되는 지를 선별하기 위한 사전 검증 및 사후 모니터링에 관한 비용

이 절감되고 운용주체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책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녹색분류체계에 관한 연구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선 방향 및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금병욱·서교원, 2025 ; 금병욱, 2025). 금병욱·서교원(2025)은 유럽연합, 중국, 아세안,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의 녹색분류체계를 비교·분석한 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개선 방향으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기업의 지속가능성공시기준과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 활용 가능성 제고, 고탄소 산업의 중장기적 녹색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전환부문 확대 필요, 국제 주요 분류체계와의 정합성과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금병욱(2025)은 EU 택소노미 공시제도의 구조와 실제 기업공시 사례를 분석한 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공시제도 도입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공시 항목은 매출액, 자본적 지출, 운영비용 등 EU 택소노미와 같이 구성하고, 초기에는 매출액 기반의 단일 KPI 중심 간소화된 공시 항목 체계, 적합성 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격성 평가 절차를 별도로 도입하고 초기에는 적격성 평가 결과만을 공시하는 유예구조를 설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상장 대기업부터 공시 의무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녹색금융과 녹색분류체계를 함께 다루는 연구로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와 관련된 과제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임형석, 2021), 녹색분류체계 기반의 녹색금융 상품·서비스 확대를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제안한 연구(박재하·임대웅, 2022) 등이 있다. 임형석(2021)은 환경적 임팩트를 강조하는 녹색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녹색분류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추구하는 환경목표의 구체화, 글로벌 녹색금융시장에서의 정합성 확보, 친환경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과도기적 중간영역 경제활동도 녹색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준 설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박재하·임대웅(2022)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금융, 녹색금융 상품·서비스, 금융기관 공시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녹색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녹색금융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녹색분류체계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금융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제3자 인증제도 또는 환경마크 인증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 III. 녹색금융과 K-택소노미의 활용

본 장에서는 녹색금융의 중요한 수단인 녹색채권, 녹색여신, 녹색금융 활동을 지원해주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K-택소노미의 활용에 대하여 알아본다.

## 1. 녹색채권

ICMA에 의하면 녹색채권은 발행자금이 전적으로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채권으로, 구체적으로 발행자금이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 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시키는 채권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녹색채권은 2020년 12월에 발간된 국내 녹색채권 발행자 및 투자자 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 제고 및 녹색채권 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K-Green Bond Guideline, K-GBG)’에서 정의되어 있다(김이배 등, 2024).

### 가. 녹색채권의 정의

녹색채권이란 발행자금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의해 정의된 6대 환경 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 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녹색경제 활동에 사용되며, 4대 핵심 요소(자금의 사용,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의 관리, 보고)를 모두 충족시키는 채권을 말한다. 녹색채권은 외부 검토, 사후보고 등 추가 절차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일반채권과 차이가 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기업 등이 추진하는 녹색프로젝트에 대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모두 포함한다.<sup>7)</sup>

### 나. 녹색채권의 장점

녹색채권 발행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이 친환경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탄소배출 감축, 생태계 보호 및 보전,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등을 촉진할 수 있다(배유진 등, 2022). 녹색채권은 발행자와 투자자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고 있다. 녹색채권 발행자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녹색채권의 발행으로 투자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를 대외적으로 공시함으로써 발행자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낮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편 녹색채권 투자자는 녹색채권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채권 발행자의 녹색경제활동을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 실현이라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sup>8)</sup>

7)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2022.12)

8)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2022.12)

#### 다.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sup>9)</sup>

환경부는 2020년 12월 30일에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sup>10)</sup>를 발행하였다.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는 녹색채권을 발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자금 사용처, 사업 평가와 선정 과정, 자금관리,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4가지 핵심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는 비구속적인 권고안의 성격을 갖지만 금융위원회, 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는 ① 자금 사용처, ② 사업 평가 및 선정 절차, ③ 자금관리, ④ 사후보고 등 녹색채권이 갖추어야 할 네 가지 핵심요소를 국내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였고, 녹색채권의 대상이 되는 10개 분야 사업 및 예시를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거래소의 사회책임투자 채권 세그먼트와의 연계를 위해 발행전 외부검토 의무화 및 발행후 보고시 외부검토를 권고하고 있다.

〈표 6〉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 내용<sup>11)</sup>

| 구 분             |                        | 세부 내용                                                                                                                                                                                                                   |
|-----------------|------------------------|-------------------------------------------------------------------------------------------------------------------------------------------------------------------------------------------------------------------------|
| 녹색채권 정의         |                        | • 발행자금을 환경개선 목적을 위해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하고, 녹색채권원칙(GBP) 네 가지(자금 사용처, 프로젝트 평가 및 선정과정, 조달자금 관리, 사후보고) 요건을 충족하는 채권                                                                                                                   |
| 녹색채권관리체계(GBF)   |                        | •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br>* 녹색채권 발행개요, 자금의 사용처, 대상 사업의 평가 및 선정 절차, 자금 관리 방식, 사후보고에 관한 내용 포함                                                                                                            |
| GBP<br>핵심<br>요소 | 자금사용처                  | •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프로젝트*에 사용할 것<br>* 10대 분야 :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 효율화 사업, 오염 방지 및 저감 사업 등<br>• 6가지 환경목표*에 하나 이상 기여, 다른 목표와 상충 여부(국내 환경법 위반여부) 고려<br>*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천연자원 보전, ④ 생물다양성 보전,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
|                 | 프로젝트<br>평가 및<br>선정프로세스 | • 환경개선 목표, 녹색프로젝트 적격성 판단 절차 및 평가기준을 GBF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지<br>• 프로젝트 선정과정에서 참고한 녹색 인증·기준 공개, 외부검토를 권고                                                                                                                         |

9) 환경부 보도자료(2020.12.30.).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10)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또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혼용함.

11) 환경부 보도자료(2020.12.30.).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 ...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표 6〉 한국형 녹색채권 안내서 주요 내용 (계속)

| 구 분             |        | 세부 내용                                                                                                                                                                                                                                   |
|-----------------|--------|-----------------------------------------------------------------------------------------------------------------------------------------------------------------------------------------------------------------------------------------|
| GBP<br>핵심<br>요소 | 조달자금관리 | • 조달자금을 별도의 계좌, 포트폴리오, 가상의 방식 등 내부절차에 따라 적절히 추적·관리, 미사용액 운용방법을 투자자에게 설명                                                                                                                                                                 |
|                 | 사후보고   | • 자금배분 보고서(Allocation Report) 매년 작성·공개(프로젝트 개요, 배분된 자금내역, 환경개선 효과, 사용 지표 및 방법 등),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br>• 자금 전액 배분 이후 환경개선 효과에 대한 영향보고서(Impact Report)를 최소 1회 작성하고 공개 시점은 GBF에 따름<br>• 사후보고서 공개 의무<br>※ 발행자의 홈페이지 또는 채권 상장 증권거래소 등에 게재 권고 |
| 외부기관의 검토        |        | • 발행전 검토(의무) 및 발행 후 검토(권고사항)로 구분<br>• 외부검토 종류 : 4가지(검토의견, 검증, 인증, Rating/Scoring) 중 자율적 선택                                                                                                                                              |
| 부속서 1~6         |        | • 녹색프로젝트 예시, 국내 환경 관련 법 목록, 사후보고 양식 등 제시                                                                                                                                                                                                |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2020.12.30.)

2. 녹색여신 관리지침<sup>12)</sup>

금융위원회·환경부·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녹색분류체계는 친환경 녹색 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금융당국과 환경부는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 경제활동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함으로써, 녹색금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K-택소노미를 기반으로 녹색여신 도입을 위해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녹색여신 인증, 실적 산정, 공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이 녹색여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K-택소노미 기준 적합성 판단이 필요한데, 대기업의 경우 자체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이 적합성 판단을 수행할 수 있다.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관리체계는 크게 1단계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2단계 녹색여신 인증, 사전사후 관리, 녹색자산비중, 실적 산정, 공시 등 녹색여신 관리 및 내부통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금융회사가 친환경 부문에 대한 여신 제공시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 방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2)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4.12.12.).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첫째,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녹색여신”이란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의 내부통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취급되는 여신을 말한다.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린워싱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었던 금융회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녹색여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녹색여신 취급 관련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을 제시하였다.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적합성 판단)하는 주체,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금융회사가 녹색금융 활용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를 대신하여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원칙적으로 적합성 판단의 주체는 기업 등 자금사용 주체이나, 기업들의 녹색분류체계와 관련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을 허용하고 기업들의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발급하는 녹색여신 취급인증서를 통해 자금사용 주체가 녹색활동을 공시·홍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여신 활용의 혜택을 확대하였다.

넷째, 녹색분류체계의 판단기준 중 배제기준과 보호기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자금사용 주체와 금융회사의 적합성 판단 부담을 완화하고, 녹색여신이 실물경제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배제기준은 해당 경제활동이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이고, 보호기준은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의 준수 여부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기 보다는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녹색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녹색여신 취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집계하고, 금융회사의 관련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 3. 지원사업, 이차보전사업

정부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직접·간접금융 및 보조금에서부터 K-택소노미 기반 녹색경제 활동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표 7〉 정부의 녹색금융·보조금 지원 제도<sup>13)</sup>

| 구 분          | 채권                                      | 여신                                                                              | 융자 지원                                                  | 보조금                                                             |
|--------------|-----------------------------------------|---------------------------------------------------------------------------------|--------------------------------------------------------|-----------------------------------------------------------------|
|              |                                         | 시설자금대출                                                                          | 시설자금대출,<br>R&D자금                                       |                                                                 |
| 정책<br>/상품명   | 한국형 녹색채권<br>발행 이차보전<br>지원사업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br>이차보전 지원사업                                                         | 탄소중립 전환 선도<br>프로젝트 융자 지원                               | 탄소중립설비<br>지원사업                                                  |
| 지원 기관        | 한국환경<br>산업기술원                           | 국책 및 시중은행 여신<br>제공<br>* 산업은행, 신한은행,<br>KB국민은행,<br>우리은행                          | 한국산업단지공단<br>* 14개 취급 은행                                | 한국환경공단                                                          |
| 기업 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br>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br>중소기업                                                              | 대기업, 중견기업,<br>중소기업                                     | 배출권할당제 대상<br>기업                                                 |
| 대상 기업        | 녹색 설비 신규 구축<br>예정 기업                    | 녹색 설비 신규 구축<br>예정 기업                                                            | 저탄소 전환 설비·<br>건축물 설치 또는<br>기술사업화 R&D<br>수행 기업          | 온실가스 감축설비를<br>설치·교체하는 기업                                        |
| 혜택           | 대기업/공공기관<br>: 0.2%<br>중소/중견기업<br>: 1.0% | 정부 지원금리 0.5%<br>+ 금융기관 자체<br>지원금리<br>※ 산업은행 : 1.7%<br>이내, 우리은행 :<br>2% 이내 (대기업) | 대기업 이율 1.93%<br>(50%)<br>중소/중견기업 :<br>1.43% (100%/90%) | 설비 투자비의 30~70%<br>보조금 지원<br>※ 대기업 30%,<br>중견기업 50%,<br>중소기업 70% |
| 대출<br>/지원 한도 | 기업별 최대 3억원<br>이자 지원                     | 기업별 2조원 이내                                                                      | 시설자금 500억원<br>이하, R&D자금<br>100억원 이하,<br>합산 최대 500억원    | 사업장별 연간 1천만원<br>이상 60억원 이하, 업체<br>별 연간 100억원 이하                 |

※ 출처 : 임대웅(2025b)

각종 지원제도 중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3) 임대웅(2025b), “지속가능금융과 K-텍소노미”

## 가.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sup>14)</sup>

### (1) 사업 개요

한국형 녹색채권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녹색경제활동에 해당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sup>15)</sup>’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을 말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및 조기 안착을 통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와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금융·산업 현장의 녹색금융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다.

### (2) 지원내용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기업이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하였을 때 납부해야 할 이자액의 일부를 정부가 정한 지원금리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 지원은 발행금액의 0.2%(대기업·공공기관 등) 또는 0.4%(중소·중견기업)로 최대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까지이고, 2024년의 경우 예산 총액은 76억 8천만원이었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요건은 다음 <표 8>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신용등급,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에 따라 다르다.

<표 8>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요건

| 구 분             | 주요 내용                                                        |                      |
|-----------------|--------------------------------------------------------------|----------------------|
| 장기신용등급          | • 대기업·공공기관 등                                                 | A0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                 | • 중소기업·중견기업                                                  |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 녹색분류체계<br>적합 여부 | •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 충족<br>• 자금사용(용도)이 시설자금을 비롯한 설비투자금 |                      |

※ 출처 : 환경부 보도자료(2024.4.25.)

## 나.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sup>16)</sup>

### (1) 사업 개요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14) 환경부 보도자료(2024.4.25.).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등 3.9조 원”

15)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절차, 외부검토 기관 등록제, 사후 외부검토 실시 의무화, 녹색자금 사용처 표시 등의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적 원칙과 기준을 제시

1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22.1.28.).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 안내서”

감축 공정·산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민간금융기관에서 낮은 대출금리로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 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사업명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로, 예산규모는 2022년의 경우 142.5억 원으로 총 대출규모는 5조원 이내, 2023년 242.5억 원, 2024년 319억 원으로 하였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대상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우대 대출상품 취급 금융기관으로, 기업이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시 금융기관이 감면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사업의 내용으로 한다.

## (2) 지원대상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요강」 제4조(금융기관 요건)<sup>17)</sup>에 나와 있다. 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등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사업장 온실가스 발생 저감 효과가 있는 설비·장비로의 교체·신설 비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으로,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요강」 제6조(이차보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시설자금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업장 온실가스·에너지 감축가능 설비 및 공정개선 관련 설비 투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국가 탄소중립 등을 위하여 인정하는 자금 용도 등이 해당된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운영 요강」 제7조(이차보전 대상상품 설계 원칙)에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하는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한다. 그 원칙은 실수요자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리 차등 적용(단,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상향 우대하는 방식), 온실가스·에너지의 예상 감축 효과에 따른 우대 기준, 검증기관을 통한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계획서 제출 의무, 금융기관 대출 승인일로부터 대출 상환 완료 시점까지 온실가스·에너지 감축 공정·산업전환이 완료된 시설 유지 의무 등을 말한다.

## 4. K-택소노미의 활용<sup>18)</sup>

### 가. 기업 입장

K-택소노미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자금조달에 활용된다. 유럽 기업에게 택소노미는 의무공시 기준으로 기업들이 투자자 및 금융기관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에서

17)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④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⑥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18) 임대웅(2025a). “K-택소노미와 녹색·전환금융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

도 동일하게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공시 측면에서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택소노미 별도보고서를 발간하거나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통합하여 발간하는 등 택소노미 공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둘째, 자금조달 측면에서 대기업에도 녹색채권 발행, 녹색여신(공장신증설·개조) 등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 혜택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택소노미 보증, 이차보전, 신용보강(P-CBO, CLO 등) 등 추가적인 혜택이 있다.

〈표 9〉 EU 택소노미의 활용 현황 : 기업 입장

| 구 분 |          | EU 택소노미의 활용 현황                                                                                                                                                                                                                                                                                                                                                                                                                                                                                          |
|-----|----------|---------------------------------------------------------------------------------------------------------------------------------------------------------------------------------------------------------------------------------------------------------------------------------------------------------------------------------------------------------------------------------------------------------------------------------------------------------------------------------------------------------|
| 기업  | 지속가능성 공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부터 유럽의 상장 대기업들은 택소노미공시 의무(민형사상 법적 책임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활동에 대해 택소노미 대상(eligible) 및 기준충족 여부(aligned)를 구분하여 공시</li> <li>－경제활동별 매출액, CapEx, OpEx 및 CapExPlan 공시</li> </ul> </li> <li>• 유럽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의 기준(ESRS)은 택소노미구조를 그대로 차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환계획(CapExPlan), (2) Scope 1~3 온실가스 감축 조치, (3) 재무영향 관련 공시에 택소노미 활용</li> </ul> </li> </ul> |
|     | 자금조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경제활동 관련 매출 비중 및/또는 CapEx비중, CapExPlan에 따라 녹색금융의 자금조달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색 매출 비중 : 주식 투자, 회사채 발행, 운전자금 여신, 보험언더라이팅 등에 활용</li> <li>－녹색 CapEx비중, CapExPlan : 녹색채권 발행, 특수목적의 시설자금 여신 및 PF 등에 활용</li> </ul> </li> </ul>                                                                                                                                                                             |

※ 출처 : 임대웅(2025a)

## 나. 금융기관 입장

K-택소노미는 금융기관의 지속가능성 공시, 녹색·전환금융에 활용된다. 유럽 금융기관에 택소노미는 의무공시 기준으로 활용 중이며, 우리나라의 K-택소노미는 공시보다는 금융지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EU 택소노미는 주로 공시를 위주로 제도화됐으나, K-택소노미는 금융실적 위주 공시 등 녹색금융과 연계하여 도입되고 있는 특징이 있다. K-택소노미는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2022), 녹색여신 관리지침(2024)에 따라 녹색·전환금융에 이미 활용되고 있다. 향후 자본시장의 투자(주식, 채권, 대체)와 자산운용, 보험(언더라이팅) 등으로 확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10〉 EU 택소노미의 활용 현황 : 금융기관 입장

| 구 분      |                                   | EU 택소노미의 활용 현황                                                                                                                                                                                                                                                                                                                                                                                          |
|----------|-----------------------------------|---------------------------------------------------------------------------------------------------------------------------------------------------------------------------------------------------------------------------------------------------------------------------------------------------------------------------------------------------------------------------------------------------------|
| 금융<br>기관 | 공시<br>(지속가능성,<br>택소노미,<br>지속가능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4년부터 EU의 은행, 투자기관, 자산운용사, 보험사는 택소노미에 따른 녹색금융 실적 공시 의무(EU 택소노미, CSRD)<ul style="list-style-type: none"><li>－녹색금융 실적은 피투자기업(또는 차주)의 녹색경제활동 관련 매출 비중 및 CapEx비중으로 산정(녹색매출비중 90% 기업에 100억원 투자기금 규모는 90억원으로 산정)</li></ul></li><li>• EU는 지속가능금융보고규제(SFDR)에 따라 금융회사 및 녹색금융상품에 대하여 공시하며, 특히 녹색금융 상품은 Article 8, 9로 나누어 택소노미기준 등에 따라 공시 의무</li></ul>                   |
|          | 녹색<br>· 전환금융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EU는 녹색여신, 녹색투자(녹색채권 포함), 녹색자산운용, 녹색보험(언더라이팅)에 택소노미 적용</li><li>• 우리나라는 녹색채권, 녹색여신에 먼저 K-택소노미를 적용했으며, 향후 투자와 보험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녹색금융 지원 실적 및 성과에 대한 공시 의무 부여)<ul style="list-style-type: none"><li>－국내 정책금융기관들은 2030년까지 420조원 규모, 민간금융회사들도 2030년까지 283조원 규모의 녹색·전환금융 지원 목표를 수립(총 703조원 규모)</li><li>－녹색·전환금융 혜택은 보증, 이차보전, 녹색채권 발행비용 보전, 신용보강 등</li></ul></li></ul> |

※ 출처 : 임대웅(2025a)

IV. 녹색금융 발전과 K-택소노미 활용 방안

우리나라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고, 녹색채권 및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사업 등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런 여러 제도적인 뒷받침과 더불어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은 기후리스크 관리와 녹색·전환금융 지원의 두 트랙으로 발전 중이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은 기후리스크로부터 건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기후·환경 관련 신규 성장 기회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진다(임대웅a, 2025).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는 우선 녹색금융에 대하여 투자자, 피투자자, 정부 등 녹색금융 이해관계자들의 노력과 정부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 녹색금융이 아직 시장에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정책 당국이 녹색금융 활성화에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녹색금융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 먼저 알려야 할 것이다.

녹색금융 중 녹색여신과 더불어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채권의 발행을 장려하는 제도적 지원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지금보다 현실적이고 기업이나 투자자들이 수용가능한 녹색채권 발행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녹색사업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녹색채권 발행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고,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하여 발행자에게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며 발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평가비용, 사후검증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전체 지원 규모, 지원 기간, 개별 기업당 지원 한도를 크게 늘려 녹색채권 발행시장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김이배 등, 2023). 이런 관점에서 녹색금융 중 다른 하나의 수단인 녹색여신은 대기업에게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더 중요하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차입에 의존하는데 녹색경제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도 녹색여신이 중소기업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여신 지원 방안도 강화되어야 한다.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린워싱 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녹색채권 평가기관들은 발행 시점에 평가결과를 공시해야 하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사후검증을 통해 자금이 목표한 곳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공시해야 한다. 이 보고서들은 발행사와 평가사 홈페이지에 각각 공시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정보접근성 확대와 그린워싱 방지 노력을 위해 공시 장소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김이배 등, 2023). 녹색금융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녹색경제 및 녹색금융 관련 공시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녹색금융의 발전을 위하여는 기업의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투자자 등에게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녹색금융 공시제도 발전방향은 당사자들이 개별적인 입장에서만 접근하면 안 되고 녹색금융 이해관계자 모두가 업무의 중복없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녹색금융 정보의 공급과 수요의 매개체로 K-택소노미 공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김이배, 2023).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는 견고한 녹색금융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9)</sup> 첫째, 원활한 녹색금융 공급을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합성 판단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의 신용등급, 재무 정보 등 기초 정보 및 녹색 판단에 필요한 환경 정보, 기술 정보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녹색금융을 오도하는 그린워싱 우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적합성 판단에 기초해 녹색채권·여신이 공급되는 만큼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합성 판단을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시 녹색금융 판단을 위하여 탄소배출량, 혁신품목제조 현황, 신용·재무정보 등 기업데이터를 활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AI 기반의 평가시스템을 도

19) 이은숙(2025).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Taxonomy 외부검토 활용 방안”.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녹색금융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이며, 효과적인 정책금융 추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sup>20)</sup>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금융기관의 녹색 기준 판단 시 기업의 국내·외 활동에 적용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단위 외에도 향후 사업 부문 단위, 기업 단위까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대출 및 운영자금대출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 채권, 여신, 펀드 등 금융상품별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금융상품 비중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으며 전체 자산 대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 자산 비중을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기업의 투자와 금융기관의 활동을 녹색경제활동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K-택소노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AI를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K-택소노미를 잘 활용하기 위하여는 K-택소노미의 원리를 잘 파악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특히 K-택소노미는 그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분류학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조 및 단계를 흐름별로 파악한다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 K-택소노미 활용 원칙은 우선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적응,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전)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첫째, 환경목표에 기여할 것으로, 이는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의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SC ; Substantial Contribution). 둘째,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으로,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서 다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DNSH ; Do No Significant Harm). 셋째,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으로, 인권, 노동, 안전, 반부패, 문화재 파괴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MS ; Minimum Safeguards). 이들 원칙에 모두 해당된다면 다음 단계로 해당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활동기준·인정기준·배제기준·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에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K-택소노미의 논리적 흐름은 시스템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고, 특히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AI 시스템으로 용이하게 구현할 수 있다. 녹색금융에 AI를 접목시키면 녹색금융과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시킬 수 있다. 녹색금융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은 많은데 K-택소노미 적용을 어려워하는 현실에서 AI를 K-택소노미 적합성 판단 등에 적용한다면 녹색금융 활성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녹색금융 및 K-택소노미 활용에 AI를 적용한다면, 적합성 판단에 대한 기업과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시켜 녹색금융 활성화 및 정착에 기여하고, 녹색기업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기업 DB를 통한 정

2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2024)

보제공 및 표준 프로세스 활용을 통해 금융회사의 녹색여신 취급 역량을 강화하고, 그린워싱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녹색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금융 당국에게는 녹색여신 현황 및 평가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녹색금융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다(이은숙, 2025).

## V. 결 론

녹색금융은 녹색경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모두를 도모하는 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K-택소노미)는 기업의 경제활동이 녹색경제활동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일관된 원칙·기준을 정의한 가이드라인으로 친환경 녹색경제활동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는 녹색금융 중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인 녹색채권에 금융권 현장의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자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경제활동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 사후 관리 기준, 외부검토 활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녹색금융 중 중요한 자금조달수단인 녹색채권과 녹색여신의 적합성 판단기준으로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하도록 하는 지침이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녹색경제 활동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어야 정확한 정보 전달로 녹색금융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될 것이다. 기업들이 녹색경제활동을 제대로 전개하고 시장에서 기업들의 녹색경제 공시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된다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녹색경제활동을 기업 자신들의 기본 비즈니스와 연계하여 진행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녹색경제활동도 전개하고 기업 본연의 가치도 제고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탐구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이배, 2023).

본 연구는 녹색금융 발전을 위한 여러 다양한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출발점이 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우선 녹색금융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녹색경제활동을 전개하여 한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이런 역할을 해주는 판단기준이 K-택소노미이다. 녹색금융의 판단기준인 K-택소노미, 녹색채권의 기준으로 K-택소노미를 채택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녹색여신의 기준으로 K-택소노미를 채택한 녹색여신 관리지침 등은 녹색금융을 통한 기후비즈니스상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한 판단 기준 및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임대웅, 2025a).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과 K-택소노미와 관련된 제도를 파악하였다. 이후 녹색금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채권과 관련된 제도 및 발행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녹색채권이 녹색경제에 제대로 작동하게끔 해 줄 수 있도록 제정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그리고 녹색여신이 제대로 녹색경제활동에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해주는 녹색여신 관리지침, 그리고 녹색채권 발행 및 녹색전환금융 활성화를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경제활동 중 녹색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해 주는 K-택소노미의 활용, K-택소노미의 활용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색금융이 발전되기 위하여는 녹색금융과 관련된 제도 및 활동이 상호 연계되어 작동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녹색금융의 이해관계자들이 중장기적 지속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및 인식이 견고하게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 녹색금융이 제대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이 녹색경제활동에 적시에 공급되어야 한다. 또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조달된 자금이 녹색경제에 목적적합하게 사용되기 위하여는 녹색경제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K-택소노미가 그 역할을 제대로 맡아주어야 한다. 달리 말하면 녹색금융, 지속가능금융, 나아가 생산적 금융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으로 발전하려면 이러한 자금이 녹색경제활동, 생산적 경제활동에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하는 데에는 국제적으로 채택한 택소노미가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다.

현재 녹색금융 관련 담당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K-택소노미에 대하여 용어가 생소해서인지 K-택소노미를 녹색금융, 지속가능금융에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K-택소노미에 대한 지식을 갖춘 전문성 함양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K-택소노미도 기업의 경영활동 중에서 녹색경제활동 금액, 비중 등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정보공시에 해당된다. 이런 측면에서는 EU에서 택소노미 정보를 기업의 정보공시의 하나로 의무화시켰다는 데서 그 의의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K-택소노미를 제도로 만들었지만 이를 지속가능성공시의 일부분으로는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K-택소노미의 정착을 위하여는 지속가능성공시와의 연계를 통하여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정보공시와 K-택소노미 정보공시를 이중적으로 부담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효율적인 공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후 관련 경제에는 위험과 기회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제는 기후 관련 위험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이를 기회로 변환시켜 가치를 창출해주는 기후비즈니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K-택소노미를 활용하여 기후 관련 기회를 판별하여 이에 대한 기후비즈니스의 기회를 탐색하여 발전시키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녹색금융의 발전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K-택소노미의 활용 및 AI 적용을 제안한 것은 녹색금융 발전을 위하여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I시대를 맞이하여 본 연구의 접근방법

을 AI시스템으로 적용한다면 녹색금융이 더 발전될 수 있고, 녹색금융실무도 더 쉬워질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녹색금융 및 K-택소노미가 우리나라 경제활동에서 아직 정착되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제고시켜줄 수 있는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향후 녹색금융이 발전되고 K-택소노미를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져 통계수치가 축적된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정교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금병옥. 2025. “지속가능성 공시제도 연구 : EU 택소노리 공시를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34권 5호 : 105-133.
- 금병옥 · 서교원. 2025. “글로벌 녹색분류체계 비교 연구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선 방향 탐색”. 환경정책 제33권 제3호 : 49-85.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4.12.12.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2025.12.31.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 김이배. 2023.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시제도 발전 방향”. 연금포럼 가을호 제91호 : 37-49.
- 김이배 · 심동희 · 최종원. 2023.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국제회계연구 제110집 : 159-179.
- 김이배 · 최종원 · 김종대. 2024. “지속가능 금융시장과 상품”. SDG연구소.
- 박재하 · 임대웅. 2022. “역동적 혁신경제를 위한 녹색금융 추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Working Paper.
- 배유진 · 안지연 · 박복영. 2022. “녹색채권 시장 성장의 결정요인 분석 : 기후변화 요인을 중심으로”. 국제금융연구 제12권 제2호 : 35-66.
- 송홍선. 2023.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금융 발전 과제.”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제23권 제8호 : 1-21.
- 이민경. 2025. “EU녹색채권규정의 법적 쟁점과 시사점”. 금융법연구 제22권 제1호 : 195-235.
- 이은숙. 2025.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K-Taxonomy 외부검토 활용 방안”. 2025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자료.
- 임대웅. 2025a. “K-택소노미와 녹색 · 전환금융의 국내외 동향과 대응방안”. 서울대학교 발표자료.
- 임대웅. 2025b. “지속가능금융과 K-택소노미”. 서울대학교 발표자료.
- 임형식. 2021.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관련 과제”. 금융포커스 제30권 제5호.
- 최순길 · 윤순진 · 권상화 · 이태성 · 김현지 · 최지은. 2025. “녹색수출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환경정책 제33권 제2호 : 207-245.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1.28. “녹색정책금융활성화 이차보전사업 취급 금융기관 모집 공고”
- 환경부. 202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
- 환경부. 2024.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환경부 보도자료. 2020.12.30. “녹색채권 안내서 발간...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유도”
- 환경부 보도자료. 2021.12.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제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 환경부 보도자료. 2022.12.22.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 녹색기준으로 본격 적용”

- 환경부 보도자료. 2023.2.23.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녹색금융 활성화 마중물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발행 시 최대 3억원 지원”
- 환경부 보도자료. 2023.06.28. “중소기업 녹색투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 환경부 보도자료. 2024.1.31.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 환경부 보도자료. 2024.4.25.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등 3.9조 원”
- BNZ PARTNERS 홈페이지. 2025.

## A Study on the Use of K-Taxonomy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Kim Yibae\*\*

### 〈Abstract〉

This study suggested the use of K-Taxonomy among various methods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To achieve this, a basic understanding of green finance is essential. Based on this understanding, green economic activities must be distinguished. The K-Taxonomy serves as the criterion for this purpose.

To achieve this goal, this study examined theoretical approaches to green bonds, a system related to green finance and the K-Tax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green bond issuance. It also examined green bond guidelines, green credit management guidelines, and secondary preservation programs to promote green bond issuance and green transition financing. Next, it explored the use of K-Taxonomy to determine whether these green finance instruments constitute green economic activities and the application of AI to this system.

In order for green finance to develop, systems and activities related to green finance must be interconnected and functioning, and funds through green finance must be supplied to green economic activities. In order to prevent green washing and be used appropriately for the green economy, judgment on the green economy must be preceded, and K-Taxonomy must play its role properly. In the AI era, applying this study's approach to AI systems will further develop green finance and green finance practice will be easier.

The contribu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able management, was examined in this study, and the proposal for the use of K-Taxonomy and the application of AI as a concrete way to realize this goal.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practical and applicabl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green financ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ince green finance and K-Taxonomy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in Korea's economic activities, statistical figures have not been accurately available, and as a result, quantitative analysis that can enhance the robustness of the research results has not been performed. However, if green finance develops in the future and the number of cases utilizing K-taxonomy increases, and statistics are accumulated, further studies will be able to precisely perform quantitative analysis.

〈Key words〉 Green Finance, K-Taxonomy

\* This research was sponsored by Duks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funds in 2024.

\*\* Professor, Duksung Women's University, kyibae@duksung.ac.kr, First Author